韓國의 勞動所得分配率 變動

裵 震 漢*

< 目 次 >

Ⅰ. 序 論
Ⅱ. 國民所得統計에 의한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動趨勢
Ⅲ. 轉換點과 勞動所得分配率의 變動
Ⅳ. 輸出主導型 高度成長과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動
Ⅴ. 日本 및 臺灣과의 比較
Ⅵ. 結 論

Ⅰ. 序 論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1953~88년 고도성장기간 중 노동소득분배율의 움직임을 실증적으로 추정한 다음, 변동원인을 설명해 보려는 시도이다.[1)]

노동소득분배율의 개념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이 일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상황을 잘 나타내는 기본개념이며 이를 매개로 階層別 所得分配狀態에 대한 추론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소득분배율개념은 經濟成長過程과 所得分配狀況의 變化간의 관계를 연관시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채택하여 성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추세를 경험하고 또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 忠南大學校 經濟學科

1) 이 때 노동소득분배율이라 함은 純生產物(國民計定에서는 國民純生產(NNP) 또는 國內純生產(NDP) 개념)에 대한 노동소득(賃金, 俸給, 그리고 非法人企業에서의 歸屬賃金 및 俸給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II. 國民所得統計에 의한 勞動所得分配率의 變動趨勢

1. 資料 및 推定方法

국민소득통계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은 그 추정방식, 특히 비법인기업소득을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분할하는 방식과 그리고 政府被傭者報酬부분 및 海外純受取要素所得부분의 포함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1953년부터 1984년까지는 구국민계정 방식, 1970년 이후부터는 신국민계정 방식에 의해 추계되어 왔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도 이에 따라 따로 추정해야 한다.

먼저 구국민계정의 경우 비법인기업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비법인기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같은 해의 법인기업부문의 그것과 같다고 가정하는 年度別比率基準方式(economy-wide basis)을 사용하기로 한다.[2)]

이렇게 하면 다음 식으로 국민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로서 要素費用에 의한 國民純生産(net national product)의 노동소득분배율(s_1)과 要素費用에 의한 國內純生産(net domestic product)의 民間部門 노동소득분배율 (s_2)의 추세를 얻을 수 있다.

식에서 W는 피용자보수, W_u는 피용자보수 중 비법인기업부문의 피용자보수, W_g는 정부부문 피용자보수, W_f는 해외순수취요소소득 중 피용자보수부분, U는 비법인기업소득, I는 개인이자소득, R은 賃料, P는 法人利潤 또는 法人企業所得, P_f는 해외순수취요소소득 중 재산소득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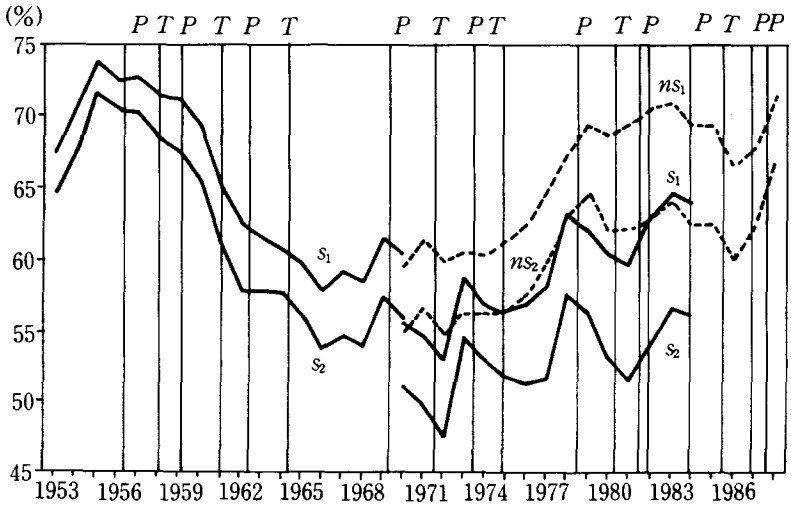
$$s_1=\frac{a(U+W_u)+W-W_u}{R+I+P+U+W} \tag{1}$$

$$s_2=\frac{a(U+W_u)+W-W_u-W_f-W_g}{R+I+P-P_f+U+W-W_g-W_f} \tag{2}$$

여기서 비법인기업소득 分割比率 $a=\dfrac{W-W_g-W_f-W_u}{I+P-P_f+W-W_g-W_f-W_u}$이다.

신국민계정에 의거 1970~88년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할 때에는 비법인기

2) 年度別比率基準方式을 사용하게 되면 비법인기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법인기업부문의 평균적인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非法人企業部門의 존재는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註 : 그림에서 P는 景氣循環의 頂點時點, T는 底點時點을 나타낸다.

〈그림 1〉 國民計定에 의한 勞動所得分配率의 趨勢

업부문 노동소득을 구하는 데 기본적으로 勞動基準方式(labor basis)을 사용하되 노동기준방식의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하여 年度別比率基準方式도 적절히 혼용할 수 밖에 없다. 그 외에 정부피용자보수나 해외순수취요소소득의 처리, 그리고 피용자보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법인기업부문 피용자보수 등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구국민계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3]

노동기준방식을 사용할 때 각 산업별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절대수는 産業聯關表내 雇傭表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의 歸屬賃金수준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 産業別 月平均賃金總額으로 잡는다. 그런데 이 임금통계의 조사대상이 常傭勤勞者 10인이상 事業體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수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는 이 노동기준방식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연도별비율기준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국민계정자료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 ns_1과 ns_2를 각각 얻는다.

3) 新國民計定에서의 추정방법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을 위해 신국민계정을 이용할 때에는 舊國民計定의 分配國民所得表에 해당하는 신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비금융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개인으로 구분) 所得支出計定表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 후자의 편제방식이 크게 달라져서 구국민계정에서의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좀 더 상세한 것은 裵震漢(1991, pp.72~74) 참조.

2. 實證的 發見事實

구국민계정에 의거한 s_1, s_2의 1953~84년간의 추정 결과와 신국민계정에 의거한 ns_1, ns_2의 1970~88년간의 결과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時系列不連續點이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살펴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한 가지는 전체적인 흐름이 뚜렷이 U形曲線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곡선의 바닥점은 대체로 1966년경에 시작되어 1972년경에 그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추세가 다소 급격하게 되는 시기는 1977년경부터이다.

또 한 가지는 勞動所得分配率과 景氣循環과의 관련성이다. 1960년대 전반까지는 노동소득분배율과 경기순환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통상 호황기에 하락하고 불황기에 상승한다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거의 예외없이 경기순환의 頂點(peak) 근처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고 있다.

III. 轉換點과 노동소득분배율의 變動

노동소득분배율의 움직임이 U형이라는 발견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하여는 下降局面과 上昇局面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편리하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강국면에 관하여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설명되어야 한다. 한 가지는 s_1, s_2의 값이 1960년대 전반까지는 왜 이후 어느 연대의 그것들보다 높은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왜 계속 하락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상승국면과 관련시켜서는 197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정말 추세적으로 상승하였는가 또 상승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왜 우리나라의 경우 호황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가 하는 문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 문제들을 이 절을 포함하여 두 절에 걸쳐서 설명하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발견사실들은 일차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구조변화, 그래서 Kuznets가설이나 轉換點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Bai(1982)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바닥점에서 상승국면으로 접어드는 1970년대 중

반시기는 바로 한국경제의 전환점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전환점에 관한 Lewis (1954)의 이론은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시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이것이 종료되는 전환점이후의 시기에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Fei and Ranis(1964)는 농업부문에서 商業化時點(commercialization point)을 통과하기 전에는 대체로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통과후에는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세가 노동과 자본간의 대체탄력성, 노동의 한계생산물(즉 실질임금)의 상승률, 기술진보의 노동사용적 편향성, 기술진보율 등 여러 변수들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南亮進(1970, pp. 90~93)도 이 점에 대해서 대체로 동일한 견해를 답습하고 있다.

1960년대 전반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시의 法人企業부문이 낡은 機械設備, 勞動集約的 生産技術, 資本蓄積水準의 低位, 企業規模의 零細性 등으로 말미암아 피용자보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가가치를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4] 1970년대 중반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하락하여온 현상은 일차적으로 轉換點理論에서 주장하는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의 실행과 이에 따른 도시부문에서의 취업기회 확대가 농촌노동력의 유출을 촉발시켰고 이는 나아가 도시부문의 임금수준을 농촌내부의 생존임금수준과 크게 괴리되지 않을 만큼 묶어 두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都市 工業化先導部門의 利潤所得擴大 및 資本蓄積, 그리고 기업의 대형화 및 산업조직의 독과점화 추세 등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전환점 이전에는 노동소득이 주로 경제전체의 총노동력증가에만 영향받을 뿐 이를 차감한 경제성장의 나머지 성과는 非勞動所得으로 분배되어 계속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을 것이다.

상승국면과 관련시켜서는 국민경제전체로 볼 때 197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추세를 보여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裵茂基(1984) 및 金玉岩(1986)의 추정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4) 이러한 사정은 1953~64년 시기의 전체 경제성장률이 幾何平均으로 연평균 4.7%(非農林漁業 5.3%)로 1965~70년기간의 9.6%(14.3%), 1970년대 8.9%(10.7%)에 비해 훨씬 낮았다는 사실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1953~64년간의 공업구조를 보면 輕工業의 비중이 69.6~80.5%에 이르고 있었다.

상승추세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일반정부의 피용자보수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을 구국민계정의 경우 통상 4.5~7.1% 포인트, 신국민계정의 경우 3.9~7.5% 포인트 정도 一律的으로 높였다는 계산결과를 구할 수 있지만 그 추세는 다소 하향하는 추세이므로 이 요인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추세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의 경우 해외진출 노동력이 많았고 그동안 外債나 外國人 直接投資 등이 규모가 크고 또 그 수준이 1980년 이후 급증하였기 때문에 해외순수취요소소득 요인도 노동소득분배율 추세에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림 1>에서 1980년대 전반기까지에는 s_1과 s_2간의 간격이나 ns_1과 ns_2간의 간격의 크기가 급속히 증가하였다가 1986년 이후 다시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980년대 전반기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세에 해외순수취요소소득의 포함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즉 전환점 이후 추세적인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은 무엇보다도 한국경제의 國內生産物市場, 勞動市場 등에서의 수요·공급요인에 의하여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자. Y를 경제전체의 법인기업부문의 소득총액, W를 그 노동소득총액이라 하자. 경제전체의 법인기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 W/Y는 w가 임금률이고 L이 총노동투입량이라 할 때 wL/Y이며 나아가서 $w/(Y/L)$이기도 하므로 노동투입단위당 생산량 Y/L를 y로 나타내면 결국

$$G(W/Y)=G(w)-G(y) \tag{3}$$

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 식에서 G(·)는 해당변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한편, Fei and Ranis(1964)나 南亮進(1970, p. 92)의 설명에 의하면

$$G(W/Y)=B_L+\{G(w)-(B_L+A)\}(1-\sigma) \tag{4}$$

도 성립하는데[5] 여기서 B_L은 技術進步에서의 勞動使用的 偏向性, A는 技術進步率, σ는 자본과 노동간의 代替彈力性, $G(w)$는 실질임금률의 증가율로서

5) 이 식은 물론 生産函數 $Y=F(K,L,t)$(여기서 t는 기술진보를 포착하는 변수)에서 유도되며 이 생산함수는 생산요소가 둘이며 1次同次性이 성립한다는 가정과 항상 均衡이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 있는 것이다.

MP_L을 노동의 한계생산물이라 할 때 균형에서 항상 $G(MP_L)$과 동일한 값이다.

전환점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금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식에서 u는 실업률이며 이의 하락은 노동시장의 경색을 의미하며 전환점 이후부터는 w의 상승을 초래한다. w_s는 생존수준에 가까운 '制度的賃金(institutional wage)'으로 전환점론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환점이전에는 그 실질수준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w=\text{Max}\{w_s,\ w(u)\},\ \partial w/\partial u<0 \tag{5}$$

식 (3), (5)에서 전환점이전에는 임금수준이 w_s로 고정되므로 $G(w)$가 0의 값을 가지며 이때 노동소득분배율의 움직임은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이 진행되고 있다면 $G(y)$가 반드시 陽數일 것이므로 Lewis의 서술대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다가 전환점 이후에는 실업률의 하락과 동시에 w의 상승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킬지 여부는 식 (4)의 각 변수들의 값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σ의 값이 1보다 상당히 작고[6] $G(w)$가 커서 그외 A와 B_L의 효과가 이를 압도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은 위 식들에서 유도할 수 있는 아래 식 (6)의 높은 실증적 설명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식에서 W/Y에 사용될 자료는 앞에서 추정한 국민계정자료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로서 s_1, s_2, ns_1, ns_2가 모두 사용가능하다. u는 非農家失業率인데 위 식들에 의거할 때 β_2의 부호는 당연히 陰이어야 할 것이다. D변수는 전환점을 포착하기 위하여 1975

6) 一國經濟의 代替彈力性의 크기나 그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①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변화, ② 노조의 교섭력, ③ 생산기술의 자본집약도가 상이한 생산물들에대한 수요구성의 변화, ④ 투입요소의 질 개선 속도, ⑤ 생산기술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生產技術의 特性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발도상국일반으로 일반화시켜서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첫째, ①과 관련시켜 볼 때 전환점 이전의 경우 실질임금의 변동이 크지 않으므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탄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둘째, ③과 관련시켜서는 輸出主導型 經濟의 경우 생산기술에서 資本集約度가 낮은 수출산업의 성장은 경제전체의 대체탄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리라는 점, 셋째, ⑤에 관하여는 오늘날 개발도상국 경제가 사용하는 資本財는 대부분 自國實情에 맞게 자체개발된 것이 아니라(실제 자본재에 관한 한 개발도상국들의 자체개발능력은 크게 제한적일 것이다) 선진국에 의해 이미 旣成化된(ready-made), 그리고 技術代替가 거의 불가능한 기계설비로서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 경제의 대체탄력성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사실 등이다.

〈表 1〉 轉換點과 失業率變數의 說明力

從屬變數 說明變數	s_1 (1963~1984)	s_2	ns_1 (1970~1988)	ns_2
常 數	55.95*	50.66*	78.49*	72.48*
	(27.68)	(26.09)	(21.83)	(26.29)
D	17.53*	16.65*		
	(3.16)	(3.13)		
u	-0.05	0.03	-2.15*	-2.07*
	(-0.27)	(0.17)	(-3.60)	(-4.52)
Du	-2.07*	-2.27*		
	(-2.35)	(-2.68)		
R^2	0.69	0.52	0.43	0.55
$\tilde{R}^2$	0.33	0.17		

註 : ( )안의 수치는 t값이고 *는 추정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이다. $\tilde{R}^2$은 전환점더미변수를 전혀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계수이다.

년 이후를 1로 취하는 더미변수이고 Du는 그 상호작용항이다. 이 식의 회귀분석결과는 〈表 1〉에 요약되어 있다.

$$W/Y=\beta_0+\beta_1 D+\beta_2 u+\beta_3 Du+\varepsilon \tag{6}$$

추정결과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환점변수와 실업률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충분히 가지며 그 부호도 이론의 예측과 부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1970년대 전반까지는 실업률변수의 설명력도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잉여노동력이 충분할 때에는 실업률의 변화 그 자체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의미있는 효과를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轉換點 以後에 非農家失業率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전환점 이후에는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이동이 과거보다 좀 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都市部門의 勞動力供給도 制約的으로 되는데 이 때 노동력수요가 증가하여 실업률이 줄어들 정도가 되면 賃金이 상승할 것이고 이것이 다시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식 (5)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경제전반의 생산요소들간의 代替彈力性이 1보다 낮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전환점모형의 높은 적합성은 바로 전환점 이전에는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에 주로 기인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제한적인 노동력공급과 그에 따라 상대적으

로 빨라진 임금상승, 그리고 투입요소간 낮은 대체탄력성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잠정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IV. 輸出主導型 高度成長과 노동소득분배율의 變動

앞절에서 한국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과정을 전환점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이 전환점 그 자체는 단지 밖으로 드러난 하나의 표면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환점모형만으로는 왜 1970년대중반에 전환점이 출현하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나 우리의 둘째 발견사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순환과의 관련성을 해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W/Y의 변동을 야기시키는 좀 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究明이 필요한 것이다. 그 원인은 분명히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방식과 관련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경제 노동소득분배율변동의 원인이 그 동안 한국경제가 채택하여온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政策[7] 가운데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처럼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채택하여 온 나라에서 재화와 용역, 그리고 생산요소의 國際去來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가? 이는 지금까지 전혀 다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다. 우리는 이를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생산요소의 국제거래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이다. 한국과 같이 대외개방의 정도가 큰 나라에서는 해외진출노동력이 많아서 해외로부터 얻는 많은 受取勞動所得이 피용자보수에 합산되고 외국인 直接投資나 外債水準이 높아서 해외로의 支給財産所得이 많고 그것이 영업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국제간 요소거래 자체가 노동소득분배율을 일정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

7)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취하여 왔다고 규정한다. 李天杓(1983, pp. 90~92)에 따르면 輸出主導型 經濟(export-oriented economy)는 흔히 輸入代替型 開發戰略(import substitution development strategy)을 취하는 경제와 대립되어 설명된다고 한다. 그래서 '後者가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산업을 국민경제내에 보유하고 이들 산업간의 産業聯關關係의 極大的 活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前者는 상대적으로 넓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고 개별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자 하여 비교적 短期에 동원가능한 자원을 規模의 經濟가 있거나 수출이 용이한 몇가지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하하고 그 산출물을 원칙적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輸出主導型 經濟의 주요 특징도 '輸出部門이 經濟의 維持와 成長에 주요부문이 되는 경제'로서 '경제의 循環과 成長은 수출부문의 그것에 陽的으로 의존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다. 勞動力의 輸入이나 資本輸出이 많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는 생산물의 輸出入去來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한국과 같이 일찍부터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政策을 취하여 온 경우 전략적으로 채택되는 수출산업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첫째 勞動集約的 産業이라는 점으로 나타난다. 資本이나 技術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低賃金이 유지되는 산업에서 빠른 수출확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수출산업은 주로 低賃金産業이었다. 이는 물론 초기의 특징일 수 있다. 수출산업과 비수출산업간에는 노동시장이 특별히 分斷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이러한 수출산업의 상대적 저임금현상은 이 산업들에 특히 女性勞動者와 低學歷 勞動者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수출산업의 세번째 특징은 수출산업이 직면하는 세계시장의 수요곡선은 거의 수평에 가까울 정도로 價格彈力性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輸出市場이 극심한 경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할수록 생산물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단위당 이윤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輸出産業의 이와 같은 특징은 바로 이 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非輸出産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輸出産業의 成長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우선 수출산업이 대체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높은 산업들이므로 이 산업들의 구성비가 높아져서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경로가 있다. 다른 하나는 소위 轉換點을 앞당겨서 過剩勞動力을 축소시키고 생산성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경로이다. 물론 이 때에는 대체탄력성이 상당한 정도로 낮아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전환점을 앞당기며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인다는 우리의 논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간단하게 모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Y를 어떤 해당부문의 소득총액, W를 그 노동소득총액이라 하자. 경제전

체의 법인기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을 W/Y, 이 중 수출산업부문의 그것을 W_1/Y_1, 내수산업부문의 그것을 W_2/Y_2라 하고 e가 수출산업의 소득비중 Y_1/Y을 나타낸다고 하면,

$$W/Y=e(W_1/Y_1)+(1-e)\ (W_2/Y_2) \tag{7}$$
$$(W_1/Y_1>W_2/Y_2\text{이고 따라서 } \partial(W/Y)/\partial e>0)$$

가 성립한다. 또 여기서 $W_1/Y_1>W_2/Y_2$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대로 수출산업부문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므로 이 부문의 마크업率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서[8]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식 (7)은 곧 다음과 같은 증가율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G(W/Y)=\frac{e(W_1/Y_1-W_2/Y_2)}{W/Y}\ G(e)+\frac{e(W_1/Y_1)}{W/Y}\ G(W_1/Y_1)$$
$$+\frac{(1-e)(W_2/Y_2)}{W/Y}\ G(W_2/Y_2) \tag{8}$$

다음 식 (4)가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에 각각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G(W_1/Y_1)$와 $G(W_2/Y_2)$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수출산업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w_1<w_2$가 성립하고 두 부문의 임금수준은 상호관련을 가지면서 전환점 이후에는 수출부문의 비중상승에 따라 상승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

8) 법인기업부문내 세세분류 산업분류수준에서 i산업의 생산물가격을 p_i라 하고 그 限界費用(原料費用, 賃金과 俸給을 포함한 勞動費用 등의 합계)을 mc_i, 이 부문 생산물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η_i라 하면 가격이론의 표준적인 공식에 따라 다음 식이 성립한다.

$$(p_i-mc_i)/p_i=1/\eta_i \tag{註1}$$

x_i를 i 산업의 産出量(output 개념으로서 不變價格기준의 生産(product) 또는 附加價値에 中間投入이 합하여진 개념)이라 할 때 $\Sigma_i\ p_ix_i$는 법인기업부문 전체의 총산출액(T)이 되고 다음과 같이 이 경제전체의 加重平均 價格彈力性의 逆數($1/\eta_a$)를 구할 수 있다.

$$\frac{\Sigma_i\ p_ix_i(1/\eta_i)}{\Sigma_i\ p_ix_i}=(1/\eta_a)=\frac{Y-W}{T} \tag{註2}$$

그렇다면 이제 식 (註2)을 변형시켜 다음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W/Y=1-(1/\eta_a)(T/Y) \tag{註3}$$

식 (註3)에서 T/Y는 부가가치율의 역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출부문과 내수부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일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가격탄력성이 큰 수출산업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W/Y) 역시 높아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식 (8)을 식 (7)에 대입한다면 다음 식을 구할 수 있다.

$$G(W/Y)=\frac{e(W_1/Y_1-W_2/Y_2)}{W/Y}G(e)+\frac{e(W_1/Y_1)}{W/Y}[B_{L1}+\{G(w_1)-(B_{L1}+A_1)\}(1-\sigma_1)]+\frac{(1-e)(W_2/Y_2)}{W/Y}[B_{L2}+\{G(w_2)-(B_{L2}+A_2)\}(1-\sigma_2)] \quad (9)$$

이 식들은 우리가 이 절에서 제시한 輸出主導型 高度成長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우선 수출부문의 비중 e의 상승이 초래하는 효과를 보자. 식 (7)에 따르면 $W_1/Y_1>W_2/Y_2$이 성립하는 한 $\partial(W/Y)/\partial e>0$이 성립하므로 수출비중의 상승은 경제전체의 법인기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식 (9)에서는 e의 상승이 수출부문의 비중상승이라는 直接效果와 특히 전환점 이후 각 부문의 대체탄력성 σ_i가 1보다 작은 경우 수출증가→노동수요증가→실업률하락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발생하는 間接效果를 통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다음 전환점의 효과도 포착가능하다. 전환점 이전에는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에 기인하여 $G(w_i)$는 모두 0에 가까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의 움직임은 식 (3)에 따른다면 $G(w)$가 0이고 $G(y)$가 반드시 陽數일 것이므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식 (9)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여부가 훨씬 덜 분명할 뿐 아니라 그것이 e, $G(e)$, B_{Li}, A_i, σ_i 등 여러 변수들의 크기와 부호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개발의 초기, 즉 전환점 이전에는 e의 크기나 σ_i의 값이 작을 것이고, 통상 개발도상국의 기술진보의 특징이 그렇듯이 A_i의 값은 작은 陽數, B_{Li}는 작은 陰數(技術進步의 勞動節約的 偏向性)이기 쉬우므로 식 (9) 우변의 둘째와 셋째 항은 음수일 것이고 첫째 항은 陽數이더라도 그 절대값이 작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점 이후에는 노동력공급이 제한적으로 되고 따라서 w도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수출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경기도 좋아지며 노동력수요도 증가(실업률이 하락)할 것이므로 임금의 상승속도도 빨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e)$와 $G(w_i)$가 모두 상당한 크기의 양수일 것이므로 이미 언급한 대로 수출산업의 비중증가와 빠른 실질임금의 상승, 그리고 개발초기

〈表 2〉 勞動所得分配率變動과 景氣循環, 經濟成長率, 輸出比率變動의 相互關係

從屬變數 說明變數	$s_{2,t}$	$s_{2,t}$ (1955~1984)	$s_{2,t}$	$ns_{2,t}$	$ns_{2,t}$ (1971~1988)	$ns_{2,t}$
常 數	5.93	-1.02	40.79*	6.60	0.66	34.31*
	(1.15)	(-0.15)	(3.18)	(1.05)	(0.08)	(3.23)
$s_{2,t-1}$	0.88*	0.98*	0.37*			
	(9.53)	(8.49)	(1.94)			
$ns_{2,t-1}$				0.88*	0.96*	0.33
				(8.44)	(7.03)	(1.61)
P	1.96*			2.65*		
	(2.09)			(3.88)		
g_t		0.29*			0.26*	
		(2.01)			(2.10)	
e_t			-144.36*			7.42*
			(-2.83)			(3.19)
D			-11.22*			
			(-2.73)			
De_t			160.04*			
			(2.92)			
R^2	0.77	0.77	0.80	0.85	0.77	0.82
$D.W.$	2.05	2.01	1.78	1.88	1.54	1.45

註 : 通常의 最小自乘法에 의한 추정결과이며 ( )안의 수치는 t값이고 *표시는 5% 유의수준(단측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이다. $s_{2,t-1}$나 $ns_{2,t-1}$는 $ns_{2,t}$의 1期前 時差變數이다. s_1와 ns_1의 경우도 추정해 보았으나 그 결과가 위 s_2, ns_2의 경우와 극히 유사하여 표에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보다는 높아진다고 하여도 여전히 1보다 상당히 낮은 대체탄력성 탓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상승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식 (10)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식에서 e는 수출비율, D는 수출비율이 0.1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경제활동이 되기에 이르는 1968년 이후부터 그 값이 1이 되는 수출더미변수이다. 여기서 수출비율 e의 상승은 실질임금(특히 전환점 이후), 경제성장률, 나아가서 경기순환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이들 변수가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도 있다. 식 (9)의 예측대로라면 전환점 이후 설명변수 e의 추정계수의 부호는 당연히 陽일 것이다.

$$W/Y=f(e,\ D),\ \partial(W/Y)/\partial e>0 \tag{10}$$

식 (10)과 관련된 추정결과가 〈表 2〉이다. 표에서 P는 경기순환에서 호황기의 경우 그 값이 1이 되는 好況期더미變數이고 g_t는 t기의 GDP成長率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e_t는 수출액(재화와 용역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율이다. 1期前 時差從屬變數 $s_{2,t-1}$와 $ns_{2,t-1}$를 도입한 것은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에서 趨勢成分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表 2〉의 결과에 따르면 1期前 時差從屬變數의 계수는 물론이고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결정계수도 모두 0.77 이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는 호황기의 경우 뿐만아니라 수출비율이 높아질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보다 높아졌으며 또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져 왔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지금까지 好況期에는 어김없이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졌다는 사실, 나아가서 수출비율이 높을수록 또 경제성장이 빠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져 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발견이다. 이 발견사실에 대하여 한 가지 가설적인 설명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산업화 또는 자본주의화가 철저하게 진행된 先進國의 경우는 利潤의 변동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력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勞動集約的 輸出産業(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높다)을 중심으로 한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전략을 채택한 開發途上國의 경우는 경기변동의 원인이 주로 海外經濟의 浮沈에 놓여있고 특히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호황기에는 노동력수요가 급속히 伸張되어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수 있다(특히 전환점 이후)는 설명이다.

위 논의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전환점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요인은 바로 이 시기의 未熟練勞動力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흡수력을 발휘하였던 輸出産業을 중심으로 한 製造業의 급속한 성장이었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수출산업의 이러한 기여는 몇 가지 분석결과로서 뒷받침할 수 있다.

먼저 이 수출산업[9]과 내수산업에 속하는 소분류산업들의 산업구성비의 변화 등이 광공업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변동에 미친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表 3〉을 얻었다.

9) 〈表 3〉에서 수출산업이라 함은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産業關聯表상 總産出 중 輸出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表 3〉 鑛工業 勞動所得分配率의 變化要因別 效果推移[10]

(單位 : %)

	1963~75	1975~78	1979~86	1986~88
鑛工業 全體	-4.59	3.92	-5.67	2.09
産業構成變化 效果	-0.98	2.08	0.65	0.16
企業規模構成變化 效果	-0.44	0.60	0.41	0.29
同一産業·規模內 變化	-3.16	1.23	-6.73	1.64
輸出産業	1.61	2.57	-1.63	1.39
産業構成變化 效果	3.48	1.20	1.71	0.08
企業規模構成變化 效果	0.13	0.12	0.34	0.23
同一産業·規模內 變化	-2.01	1.26	-3.68	1.08
內需産業	-6.20	1.34	-4.04	0.70
産業構成變化 效果	-4.46	0.89	-1.05	0.08
企業規模構成變化 效果	-0.57	0.48	0.06	0.06
同一事業·規模內 變化	-1.16	-0.02	-3.05	0.56

註 : 鑛工業 전체 행의 수치는 『산업센서스보고서』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직접 얻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실제 변화와 거의 동일함.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수출산업은 裵震漢(1991)에 따를 때 대체로 중화학 공업화시기 이전까지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주도함으로써 경제전체의 대체탄력성을 낮추는 쪽으로 기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表 4〉는 우리나라에서 低學歷·未熟練 勞動力에 대한 또 하나의 거대한 수요부문인 都小賣·飮食宿泊·個人서비스業부문의 고용흡수력과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그것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도 소위 전환점 직전까지 제

10) 이 표는 아래식으로 추정된 것이다(이 식의 유도과정은 〈附錄〉을 참조할 것).

$$\Delta s=\sum_i \frac{\alpha_i^0+\alpha_i^t}{2}\Delta c_i+\sum_i \frac{c_i^0+c_i^t}{2}\sum_j \frac{\alpha_{ij}^0+\alpha_{ij}^t}{2}\Delta c_{ij}$$
$$+\sum_i \frac{c_i^0+c_i^t}{2}\sum_j \frac{c_{ij}^0+c_{ij}^t}{2}\Delta \alpha_{ij}$$

s는 대상산업들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c_i는 i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α_i는 i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다. 이 때 상첨자 0은 분석의 始點年度, t는 終點年度를 나타낸다. 그리고, $\Delta s=s^t-s^0$, $\Delta c_i=c_i^t-c_i^0$, 또 $\Delta \alpha_i=\alpha_i^t-\alpha_i^0$이다.

α_{ij}는 i산업내 j번째 규모분류 기업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고 c_{ij}는 마찬가지로 i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1로 할 때의 i산업내 j번째 규모분류의 부가가치비중이다. 물론 $\Delta s_{ij}=s_{ij}^t-s_{ij}^0$, $\Delta \alpha_{ij}=\alpha_{ij}^t-\alpha_{ij}^0$가 성립한다.

결국 위 식의 우변 첫째 항은 산업구성의 변화가 광공업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에 기여한 부분이고, 둘째 항은 산업내 企業規模構成의 變化가 광공업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에 기여한 부분이 되며 마지막 항은 同一産業·同一企業規模내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 加重合을 나타낸다.

〈表 4〉 都小賣·飮食宿泊·個人서비스業部門 雇傭增加率과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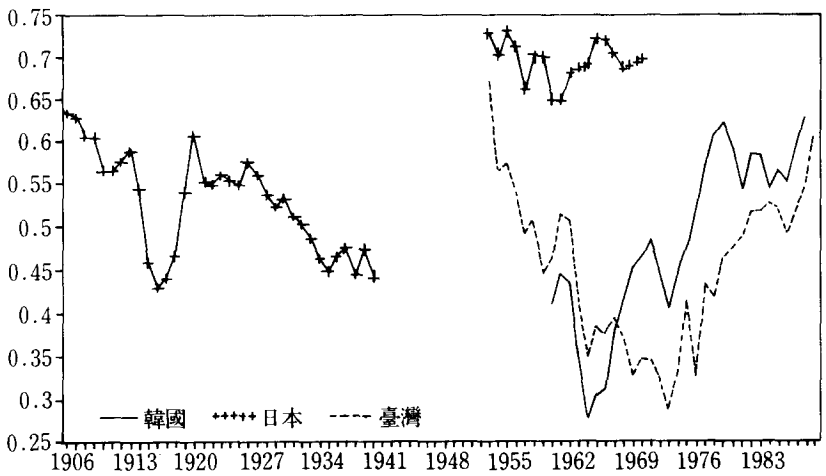
(從業員 幾何平均 年增加率, %)

年 度	都小賣·飮食宿泊·個人			製 造 業			輸 出 産 業		
		(男)	(女)		(男)	(女)		(男)	(女)
69~71	6.78	4.43	9.44	4.88	2.41	8.77	7.40	5.65	8.91
72~76	2.61	2.81	2.39	14.30	12.20	17.00	18.19	16.36	19.59
77~79	8.51	6.80	10.25	5.17	7.51	2.40	3.64	6.67	1.39
80~82	7.91	7.46	8.33	1.02	1.66	0.17	1.82	3.40	0.49
83~86	9.03	9.76	8.34	7.29	7.89	6.44	7.92	9.67	6.28
87~88	3.45	2.07	4.80	6.04	7.46	3.95	5.34	7.88	2.69
69~88	6.25	5.63	6.91	7.21	7.04	7.47	8.44	9.08	7.81

資料 : 도소매·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이 표의 註 1)자료로 구하였고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경우는 裵震漢(1991)의 추정방식으로 얻은 자료에서 산출하였음.

註 : 1) 시기구분이 다소 불규칙하게 된 것은 『도소매업센서스보고서』, 『1986년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1988년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의 發表年度가 불규칙하였기 때문임.

2) 참고로 1~4인 규모의 零細企業을 포함한 전체 종업원수를 밝혀두면 1968년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의 경우 885千名, 제조업전체 848千名(輸出産業 423千名)이었는데 이것이 1988년에는 각각 2,974千名과 3,411千名(2,139千名)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 韓國, 日本, 臺灣의 勞動所得分配率 推移比較

조업이나 수출산업의 고용흡수력이 강력한 경쟁상대인 도소매·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의 그것을 훨씬 앞질렀음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1972~76년간의

제조업부문 노동력흡수는 괄목할 만한 정도였다.

V. 日本 및 臺灣과의 比較

앞절에서 살펴 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세(특히 U형태)는 한국경제에서만 발견되는 고유한 형태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日本과 또 특히 한국의 경우와 유사한 輸出主導型 經濟成長戰略을 채택한 臺灣과 비교하여 본 결과가 〈그림 2〉이다.[11] 그림에 따르면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의 경우 2차세계대전기간의 자료가 없어서 下降趨勢의 逆轉現象 자체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韓國과 臺灣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U형 곡선의 폭이 훨씬 좁고 가파르다는 점이다. 둘째, 유사한 성장전략을 취하여 온 韓國과 臺灣의 노동소득분배율(엄밀하게는 제조업 임금-소득비율)의 움직임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강국면이 일본의 경우보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 훨씬 짧은 이유는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는 한국과 대만의 각 해당시기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고도성장이 兩國의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기간을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단축시켰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이나 대만이 모두 일본과 달리 노동력수요를 급속히 증대시키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이것이 低學歷勞動力과 女性勞動力 등 未熟練勞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나아가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강국면을 일본에 비하여 크게 단축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은 노동소득분배율 上昇局面에 대한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戰後,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현상이 Okhawa(1968, p.180)의 주장대로 獨占財閥의 解體와 勞動組合主義의 高揚이라는 制度的 要因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과정은 그와 같은 制度的 變革없이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었던 사례이다.

---

11) 그림에서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南亮進·小野旭(1978)의 日本 工業部門(製造業, 鑛業, 建設業, 公益産業) 노동소득분배율이다. 한국과 대만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그 대리변수로서 모두 Phelps Brown and Browne(1968, pp.60~64)의 방식에 따른 製造業의 賃金-所得比率을 취하였다.

VI. 結 論

한국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추세를 일관된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1953~1988년까지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흐름이 뚜렷이 U形曲線을 그린다고 할 수 있다. 그 곡선의 바닥점은 대체로 1966년경에 시작되어 1972년경에 그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추세가 다소 급격하게 되는 시기는 1977년경부터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시기 및 바닥시기는 轉換點 以前時期, 즉 無制限的인 勞動力供給時期에 대응하며 그 상승시기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둘째의 특징은 노동소득분배율과 景氣變動과의 관련성인데,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에서의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경제에서는 그것이 대체로 경기순환의 頂點근처에서 상승할 뿐 아니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經濟成長率이 높아질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政策을 채택한 開發途上國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되며, 특히 전환점 이후시기에 있어서는 成長과 分配衡平이 서로 相衝的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事例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변화에 대한 하나의 假說도 제시할 수 있다.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전략을 채택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환점 이전에는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에 주로 기인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제한적인 노동력공급과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빨라진 임금상승, 그리고 낮은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은 바로 이 시기의 未熟練勞動力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흡수력을 발휘하였던 輸出産業을 중심으로 한 製造業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것이다.

〈附　錄〉

〈表 3〉의 推定式 誘道過程

우리나라 광공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에 광공업내부의 소분류 산업들의 구성변화와 각 소분류산업내의 기업규모구성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분할추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s를 대상산업들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라 하고 c_i는 i산업(이때 i는 광공업의 3자리수 산업분류 기준의 개별산업을 나타냄)의 부가가치 비중, α_i는 i 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라 하면

$$s^0=\sum_i c_i^0\alpha_i^0 \tag{附1}$$

$$s^t=\sum_i c_i^t\alpha_i^t \tag{附2}$$

가 성립한다. 이 때 상첨자 0은 始點年度, t는 終點年度를 나타낸다. 그리고, $\Delta s=s^t-s^0$, $\Delta c_i=c_i^t-c_i^0$, 또 $\Delta\alpha_i=\alpha_i^t-\alpha_i^0$라 하면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분 Δs는

$$\begin{aligned}\Delta s&=s^t-s^0\\&=\sum_i(c_i^0+\Delta c_i)(\alpha_i^0+\Delta\alpha_i)-\sum_i c_i^0\alpha_i^0\\&=\sum_i\alpha_i^0\Delta c_i+\sum_i c_i^0\Delta\alpha_i+\sum_i\Delta c_i\Delta\alpha_i\end{aligned} \tag{附3}$$

로 되는데 이 식(附3)을 다시 변형하면

$$\Delta s=\sum_i\frac{\alpha_i^0+\alpha_i^t}{2}\Delta c_i+\sum_i\frac{c_i^0+c_i^t}{2}\Delta\alpha_i \tag{附4}$$

가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식 (附4)의 우변 첫 항은 산업구성비의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이고 둘째 항은 동일산업내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분을 加重合한 것이다. 이 방법은 1950년대에 Denison이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를 분석할 때 산업구성 변화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을 개선시킨 것이다. 그는 식 (附3)에서 $\Sigma_i\Delta c_i\Delta\alpha_i$ 항이 제거된 식을 사용하면서 첫째항과 둘째항 모두에 調整因子로서 어떤

동일한 常數를 곱함으로써 실제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분과 요인별 효과들의 합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였다(Denison(1954), pp. 257~258). 그러나, 그의 방법은 산업의 구성이나 개별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소 급격하게 변동할 때에는 상당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 Δc_i와 $\Delta \alpha_i$가 서로 아무 상관이 없거나 또는 무슨 다른 이유로 식 (附3)의 마지막 항 값이 0으로 되지 않는 한 그의 방법은 실제와 크게 다른 결과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식 (附4)은 비록 변화의 線型性을 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이 점은 Denison의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 추정치들의 합계가 조정인자의 도움없이도 실제치와 매우 유사하였다. 이 식 (附4)의 방식은 일찌기 Törnqvist(1936)에 의해 창안되고 최근 지수문제 논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örnqvist식의 離散型 Divisia指數 형태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12]

그런데 이 결과에다 기업규모별 구성의 차원을 추가로 도입하면 식 (附4)의 $\Delta \alpha_i$는 다시 식 (附5)와 같이 변형된다. 이 식의 유도방식은 식 (附3)의 유도방식과 완전히 동일하다.

$$\begin{aligned}\Delta \alpha_i &= \sum_j \alpha_{ij}^0 \Delta c_{ij} + \sum_j c_{ij}^0 \Delta \alpha_{ij} + \sum_j \Delta c_{ij} \Delta \alpha_{ij} \\ &= \sum_j \frac{\alpha_{ij}^0 + \alpha_{ij}^t}{2} \Delta c_{ij} + \sum_j \frac{c_{ij}^0 + c_{ij}^t}{2} \Delta \alpha_{ij} \end{aligned} \qquad \text{(附5)}$$

여기서 α_{ij}는 i산업내 j번째 규모분류[13] 기업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고 c_{ij}는 마찬가지로 i산업전체의 부가가치를 1로 할 때의 i산업내 j번째 규모분류의 부가가치비중이다. 물론 $\Delta c_{ij} = c_{ij}^t - c_{ij}^0$, $\Delta \alpha_{ij} = \alpha_{ij}^t - \alpha_{ij}^0$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얻은 식 (附5)을 식 (附4)의 $\Delta \alpha_i$에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식 (附6)이 얻어진다.

$$\Delta S = \sum_i \frac{\alpha_i^0 + \alpha_i^t}{2} \Delta c_i + \sum_i \frac{c_i^0 + c_i^t}{2} \sum_j \frac{\alpha_{ij}^0 + \alpha_{ij}^t}{2} \Delta c_{ij}$$

12) 좀 더 상세한 내용은 Törnqvist指數 개념을 이용한 超越對數指數(translog index)를 生產性 測定에 응용하고 있는 최근 연구 Gollop and Jorgenson(1980)을 참조할 것.

13) 규모분류는 통상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종업원수 규모분류에 해당하며 5~9명,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명 이상의 8분류이다.

$$+\sum_i \frac{C_i^0+C_i^t}{2}\sum_j \frac{C_{ij}^0+C_{ij}^t}{2}\Delta\alpha_{ij} \qquad \text{(附6)}$$

식 (附6)의 우변 첫째 항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이고, 둘째 항은 이제 산업내 企業規模構成의 變化가 광공업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에 기여한 부분이 되며 마지막 항은 同一產業·同一企業規模내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 加重合을 나타낸다. 이 마지막 항 속에는 물론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산업의 구성변화나 그 수준에서의 기업규모구성변화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겠으나 그것들에 적용되는 가중치의 값이 매우 작아지므로 무시하여도 큰 괴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裵茂基, "韓國의 機能的 所得分配와 分配率 推計,"『經濟論集』, 第23卷 第4號,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84. 12.
2. 裵震漢, "우리나라 勞動所得分配率 變動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經濟學 博士學位論文, 1991.
3. 李天杓,『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의 反省과 改善』, 서울大學校 經濟硏究叢書 VI,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83.
4. 金玉岩, "韓國の經濟發展と所得分配,"『經濟學論纂』, 第27券 第1·2合併號, 中央大學, 1986. 3.
5. 南亮進,『日本經濟の轉換點』, 創文社, 1970.
6. _____,『日本の經濟發展』, 東洋經濟新報社, 1981.
7. 南亮進·小野旭, "要素所得と分配率の推計 －民間非1次產業－,"『經濟硏究』, 第29卷 第2號, 1978.
8. Bai, M.K.,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Developing Economies,* June 1982.
9. Denison, E.F., "Income Types and the Size Distribu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4.
10. Fei, J.C.H., and G. Ranis, *Development of Labor Surplus Economy*, Homewood, 1964.

11. Gollop, F.M., and D.W. Jorgenson, "U.S. Productivity Growth by Industry, 1947~73," in J.W. Kendrick and B.N. Vaccara (1980).
12. Heidenson, K., "Labor's Share in National Income-A Constant?," *The Manchester School*, Dec. 1969.
13. Hicks, J.R., *The Theory of Wages*, 2nd ed., Macmillan, 1932.
14. Kendrick, J.W., and B.N. Vaccara (eds.), *New Developments in Productivity Measurement and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15. Kravis, I.B., "Relative Income Shares in Fact and Theor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59.
16. Kuo, S.W.Y., G. Ranis and J.C.H. Fei, *The Taiwan Success Story : Rapid Growth with Improved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of China, 1952~1979*, Colorado, 1981.
17. Kuznets, S.,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 IV.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by Factor Shar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7 No.3 Part II, April 1959.
18. _____,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 VIII.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11 No.2, Part II, Jan. 1963.
19. _____, *Modern Economic Growth : Rate, Structure, and Spread*, Yale University Press, 1966.
20. Lewis, W.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The Manchester School*, Vol.22, 1954.
21. Ohkawa, K., "Changes in National Income Distribution by Factor Share in Japan," in J. Marchal and B. Ducros (ed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Macmillan, 1968.
22. Phelps Brown, E.H., and M.H. Browne, *A Century of Pay*, Macmillan, 1968.
23. Ranis, G., "Growth and Distribution : Trade offs or Complements" in W. Loehr and J.P. Powelson (eds.), *Economic Development,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Colorado, 1977.

24. Scott, M., "Foreign Trade," in W. Galenson(ed.),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Taiwan : The Postwar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Chin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9.
25. Solow, R.M., "A Skeptical Note on the Constancy of Relative Shar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48, Sept. 1958.
26. Törnqvist, L., "The Bank of Finland's Consumption Price Index," *Bank of Finland Monthly Bulletin*, No.10, 1936.